

# 손, 출마 끝내 거부... 민주 재보선 전략 '빨간불'

## 민주 화성갑 후보 오일용 확정

## 서청원-손학규 '빅매치' 불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7일 10·30 경기 화성갑 보궐 선거와 관련, 불출마를 최종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 고문 간 '빅매치'도 불발됐다.

손 고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대표가 두 번씩이나 직접 찾아 주시고 여러 경로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문을 연 뒤 "당의 총의를 모아서 출마요청을 하였고 당 대표의 총정을 생각해 서 나 자신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자숙할 때이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지역위원장을 공천하는 것이 좋고 제가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손 고문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던 김한길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밤새 뜬눈으로 고민한 결과, 역시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고 손 고문의 비서실장인 김영철 동아사이미래재단 대표이사 가 전했다. 손 고문은 "이게 내 확고한 최종 입장"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고문은 지난 4일 김 대표와의 심야 회동에서 출마 요청을 고사했으나 6일 김 대표와의 재회동에서 거듭된 출마 요청을 받고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고문 측 핵심관계자는 "대권주자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 아무데나 뛰어드는 모습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측근들의 반대가 많았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도 국민의 눈에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비칠까봐 만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더 이상 손 고문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일용 현 지역위원장을 화성갑 후보로 공천했다.

이에 따라 화성갑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서 전 대표와 오 위원장 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또 포항남·울릉 재선거는 새누리당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대 민주당 허대만 지역위원장 간 대결구도로 확정됐다.

손 고문의 출마 무산으로 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 정국에 따른 수세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6일 저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손학규계 인사들이 마련한 귀국 환영 만찬장을 찾아 손학규 상임고문과 독대 한 뒤 나오고 있다. 김대표는 10·30 경기 화성갑 보궐 선거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손 고문을 만났다. /연합뉴스

# 황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

## 예결산 심사 등 기일 넘기면 정당보조금 삭감

### 새누리 황우여 대표 국회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계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결국 세급도 기업에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논란으로 다시 정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치채신 문제에 대해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맞게 정치관행을 개선하고 감도 높은 정치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천방안으로는 ▲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 본회의·예결산심사 등 각종 기일과 기한의 강제화 및 위반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 상임위·본회의 불참시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공약 후퇴 논란에 힘써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당대로 공약과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화록 음원공개' 여야 살아싸움

## 與 "규명 안되면 공개 불가피"...野 "檢·與 결탁 스캔들"

### 검, 임상경 전 비서관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음원 파일 공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는 7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음원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략적 행태로 치부하며 가능한 한 대화록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대화록 삭제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부인하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생떼를 쓰고 온갖 발뺌을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문재인 의원의 말장난은 핵심 당사자로서는 부적절하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화록이 몰래 삭제됐고, NLL 포기 발언이 가득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문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헐바지로 여기는 태도가 아닌가 묻고 싶다"면서 "문 의원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이관했다고 했고, 민주당 일부 인사는 삭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일부에서 나오는 음원 공개 요구를 정략적 행태로 보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새누리당과 결탁해 대화록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최종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하고 대화록 장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선 "대화록 불법열람 유출 사건도 신속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스캔들을 만들고 언론이 받아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박근혜정부 인사난맥' 맹공

### 김한길 "신386·올드보이 귀환' 국민 격정"

민주당은 7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이 국정난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인사문제를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선 공천, 홍사덕 민화협 의장 임명 등 친박 핵심 3인방의 귀환을 '신386·올드보이'의 귀환"이라며 맹공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작정치와 부패정치로 이를 낳린 인사들이 당·정·청을 장악하며 국정을 주무르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격정이 깊다"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변화와 현실에 눈감은 채 과거 사고방식에 머무른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세는 특히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나서는 서 전 대표에게 집중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비리 전력으로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부른 서 전 대표를 '몰래 공천'이라는 새로운 공천 카테고리까지 창출하며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서 전 대표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및 2008년 총

선 당시 공천 대가로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상기시키며 "두 번 유죄를 받은 서 전 대표의 공천을 보니 대통령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공세가 이어졌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농성 진압을 지휘한 김 전 청장의 경력을 언급하며 "국민 목숨을 앗아간 진압작전 책임자가 적임자가 묻고 싶다"며 "김 전 청장 내정은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의 당헌이나 당규에도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장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 사정상 "급매"

###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
- ▶ 수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010-4667-9300**

##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